

역대급 슈퍼추경 재정건전성 '역대 최악'...나랏빚 840조원

올 정부재정 112조 '적자'...GDP 대비 '사상최고'
국가채무 전년대비 100조 순증...2차 추경서 21조↑

3차 추가경정예산안 규모

3차 추경 규모
총 35.3조원

세입경정 11.4조원 + 세출확대 23.9조원

3차 추경 포함시 코로나19 대응 정책패키지 270조원 수준

재원조달

① 지출구조조정	10.1 조원
② 기금 자체재원 활용	1.4 조원
③ 국채발행	23.8 조원

news 1

자료 기획재정부

역대 최대 규모의 3차 추가경정(추경) 예산 편성이 추진되며 올해 나랏빚이 작년보다 100조원 증가한 840조원을 돌파할 예정이다.

이로써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사상 최고인 44%에 육박하고, 정부 재정적자비율도 외환위기 당시를 능가하게 됐다.

3일 정부가 공개한 2020년 제3차 추경 예산(주경) 예산안에 따르면 이번 추경 규모는 35조3000억원으로, 약 67%(23.8조원)를 적자국제로 조달하는 것으로 계획됐다.

추경 소요재원의 약 30%(10.1조원)는 기존 예산사업 가운데 필수적이지 않은 부분을 쳐내는 지출구조조정으로 충당하기로 했다.

나머지(1.4조원)는 8개 기금의 여유재원

을 털어 내겠다고 밝혔다.

이로써 정부 재정건전성을 보여주는 지표들은 일제히 악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정부의 실제 살림살이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 적자비율이 사상 처음 5%를 넘어서게 됐다.

관리재정수지란 정부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단순 제외한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고용보험 등 사회보장성 기금을 제외한 것이다.

정부에 따르면 3차 추경으로 관리재정수지는 본예산(71.5조원) 대비 40조7000억원 늘어난 112조2000억원을 기록, 사상 처음 100조원을 넘어설 전망이다.

올 연말 우리나라 가계부에 '112조 적자'가 쓰인다는 얘기다.

이런 재정적자를 나라경제 규모(GDP)에 견줘보면 5.8%를 차지한다. 외환위기 여파가 한창이던 1998년의 기준 최고치(4.7%)를 큰 폭으로 따돌렸다.

이 비율은 2차 추경 이후 기준 최고치에 약간 못 미치는 4.5%였다.

이번 추경으로 재정적자 부담이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높은 수준으로 올라선다는 뜻이다.

본예산 기준 805조2000억원이었던 국가채무는 3차 추경안에 따라 840조2000억원으로 증가하게 됐다. 이에 따라 경제규모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39.8%(본예산)에서 43.7%까지 오른다는 계산이 나온다.

국가채무비율 43.7%는 정부가 2020년도 본예산을 짜며 2년 뒤인 2022년(44.2%)에야 넘을 것이라고 밝힌 수준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국가채무 규모가 당초 예상보다 2년 더 빠르게 늘고 있는 상황으로 풀이된다.

이뿐만 아니다. 지난해와 비교한 국가채무 순증 규모는 99조4000억원으로, 100조 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국가채무 규모는 740조8000억원이었다.

통합재정수지도 본예산(30.5조원) 대비 45조9000억원 늘어난 76조4000억원으로 계산됐다.

급격한 재정악화 우려에 대해 정부는 '불가피했다'는 입장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오르더라도 3차 추경 작업은 불가피했다"면서 "지금과 같은 경제위기 상황에서 국가 또는 재정이 최후의 보루 역할을 해주지 않을 수 없다"고 언급했다.

이어 '한국의 국가채무는 경제협력개발 기구(OECD) 회원국 평균보다 크게 낮다'는 논리를 들었다.

홍 부총리는 "국가채무의 절대규모 측면에서 GDP 대비 국가채무 43%는 OECD 국가의 110%에 비하면 상당히 재정 여력이 있고 양호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재정건전성 관리를 철저히 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3차 추경에 따른 국가채무, 적자부담 등 재정건전성에 대한 지적들을 잘 유념해 향후 재정의 중기적 건전성이 결코 악화되지 않도록 정부가 각별히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민주, '5·18왜곡처벌법' 당론 추진

"당론화 절차 시작"...177명 의원 공동발의 예정

더불어민주당이 5·18 민주화운동 특별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송갑석 민주당 대변인은 3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두 가지 법안의 당론화를 위한 절차를 시작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송 대변인은 "5·18민주화운동 특별법

개정안에 대해 당 정책위원회에서 검토를 거쳐 의원총회에서 의결을 하면 당론 법안으로 채택하는 절차"라며 "20대 국회 때 이미 당론으로 채택돼서 제출한 법안이었는데 최종적으로 국회 문턱을 뚫 넘어서 다시 추진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이 추진하려고 하는 5·18민주화

운동 특별법 개정안은 5·18에 대한 비방·왜곡·날조 등을 저버리는 조항을 신설하고 5·18 진상규명조사위원회에 강제조사권을 부여하는 등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해당 개정안은 민주당 호남권 의원들이 1호 법안으로 추진하기로 한 법안이기도 하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당 소속 177명 의원 전원의 서명을 받아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이해찬-김종인 회동 원구성 신경전

김 "원구성 빨리 이뤄져야" VS 이 "저는 임기 곧 끝나"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의 첫 대화는 건강을 묻는 덕담으로 시작됐다.

김 위원장은 3일 국회 민주당 대표실에서 이 대표를 만나자마자 "건강 괜찮으신가"라고 물었고, 이 대표는 "많이 좋아졌다고" 웃으며 답했다.

이 대표는 김 위원장이 총선에 침폐한 통합당을 수습하기 위해 비대위원장직을 수락한 것에 대해 "여러운 일을 맡으셨다"고 했고, 김 위원장은 "그렇죠. 팔자가 그렇게 되나 봐요"라고 답했다.

여야가 원 구성을 놓고 갈등을 빚고 있는 것 등에 대해서는 다소간 신경전도 벌어졌다.

김 위원장은 "정상적인 개원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며 민주당의 '양보'를

애둘러 요구했고, 이 대표는 "(김 위원장이) 여러 가지 경험을 많이 하셨으니 저희는 기존과는 (다르게) 많은 기대를 하고 있다"고 받아쳤다.

김 위원장은 "원 구성이 빨리 이루어지면 원 운영은 종전과는 달리 갈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국회 운영 과정에서 협조할 수 있다는 뜻을 내비쳤지만, 이 대표는 "저는 임기가 곧 끝나지만, 원내대표가 원숙하신 분이라 잘해나갈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에게 결정권한이 있다는 식으로 선을 그었다.

이 대표는 특히 오는 5일 국회의장 선출을 위한 본회의 개의 문제를 언급하면서 "기본적인 법은 지켜가면서 협의하고, 소통하면 된다"며 국회법을 들어 김 위원장을 은근히 압박하기도 했다.

박지원 前민생당 의원 단국대 석좌교수 임명

박지원 전 민생당 의원이 모교인 단국대학교 석좌교수로 임명됐다.

박 전 의원은 3일 페이스북에 "단국대학 교 석좌교수로 지난 1일 자로 임명받았다"며 "오늘 첫 출근해 장충식 재단 이사장님과 김수복 총장님, 안순철 대외부총장님께 신고 겸 인사 올렸다"고 밝혔다.

이어 "후배 학생들에게 대북관계, 국제정세, 국내 정치 문제를 강의하겠다"며 "대학 특강은 많이 했지만 교수는 처음이니 기쁘고 설렌다"고 덧붙였다.

박 전 의원은 1977년 단국대학교 상학과를 졸업했다. 지난해 11월에는 단국대학교에서 명예 정치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단국대 관계자는 "박 전 의원은 대북관계 전문가이자 정치 전문가"라며 "모교 학생들에게 풍부한 경험을 전달해주기를 바라면서 석좌교수로 모셨다"고 말했다.

호남신문 광고안내

광고주는 언론 종사자와 더불어
신문산업 발전의 동반자입니다.
한 분 한 분을 소중하게 여기고 단 한 줄의 광고도
감사히 지면에 반영하겠습니다.
믿고 맡겨 주십시오.
여러분의 기대에 신뢰로 보답하겠습니다.

기사제보 ☎ 062) 971-7400

광고 직통 224-5800

팩 스 222-5547

축하·근조화환 전문점

전국 꽃배달 서비스

60,000

농장직영 광주꽃도매

직통전화 010-2400-7774

주문팩스 062-946-0053

